

부안군 최초 전선 지중화사업 본격 착공 2006년까지 부안군 배전선로 지중화 등 총 289억원 투입

부안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전선 지중화 : 전봇대 형태로 노출된 전선을 땅속에 묻어 관리하는 것

산업자원부(윤진식 장관)와 한국전력(주)은 8월부터 2006년까지 부안읍과 백산면 등 11개 면에 지중화 사업(총 39.4km) 및 가공선로 정비 사업 등 총 289억원의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10억 6천만 원의 이번 1단계 전선지중화사업은 군단위로는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한전에서 전액 지원되고, 또한 한전측은 부안읍 번영로에서 주공아파트까지 0.6km 지중화 구간(부안읍 석정로~한국공업사 지중

화 구간의 일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며, 격포 해수욕장 주변 0.5km 지중화 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내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8월부터 26억원을 들여 선로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안군은 해안에 위치하여 염해(鹽害)로 인한 정전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전 없는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 미관이 현저히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성장산업 17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 선정 2003년도 산자부 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 신규과제 확정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지난 8월 19일 산업기술 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목표로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17개 지식집약적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과제수행에 착수하였다.

개발기간이 5년 내외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13개 과제와 10년 내외인 「차세대신기술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에는 2003년도 사업비로 각각 220억원과 80억원이 투입되며, 과제당 2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금번 평가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들은 산업자

원부가 지난해 말부터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한 전략적 기술개발과제로서, 해당 분야의 최고기술력을 갖춘 산·학·연 전문기관이 총괄주관기관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003년도 신규과제에는 「배기가스 규제대응 디젤엔진 개발」, 「차세대 멀티미디어방송 수신기 개발」 등 차세대 성장산업 관련과제와 「고기능 자동차강판 제조기술」, 「합성섬유의 초극세화기술」, 「고분자 복합소재」, 「나노박막 재료」 등 기간산업의 핵심소재 개발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2004

년부터 증기거점·차세대신기술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관련과제를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2,832억

한국전력(사장 강동석)은 2003년 상반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조 2,8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07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상반기 전기판매수익이 사상 최초로 10조 4,875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첫째, 국제유가 전년보다 배럴당 \$4.17 상승한 \$26.49로 상승하였다.

둘째, 발전회사에 지급한 구입전력비가 전년대비 6조 9,762억원에서 13.6% 늘어난 7조 9,27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셋째, 외화평가이익이 2002년보다 4,023억원 감소한 508억원을 기록한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한전산업개발과 파워콤 매각에 따른 지분매각이익이 452억원 증가와 적극적인 경비절감 노력으로 당기순이익 하락폭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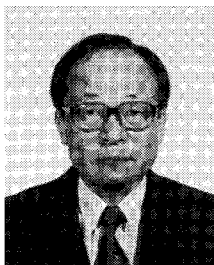
한전, 제43기 임시 주주총회 개최

상임이사 4명 선출

한국전력공사(사장 강동석)은 지난 7월 31일 한전본사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제43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강동석 사장의 추천으로 이희택 기

획본부장, 함윤상 관리본부장, 김영만 영업본부장, 윤맹현 대외사업본부장을 상임이사에 선출하였으며, 선출된 상임이사는 한전사장의 제청을 받아 산자부장관이 임명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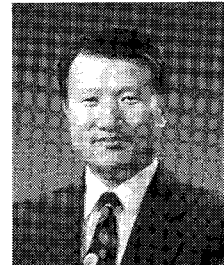
〈기획본부장 이희택〉



〈관리본부장 함윤상〉



〈영업본부장 김영만〉



〈대외사업본부장 윤맹현〉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297건 선정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지난 8월 18일, 2003년도 신기술창업보육사업자 지정결과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297명에게 266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중소기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개발자금을 1억원 이내에서 무이자·무담보로 제공하고, 전국의 8개 테크노파크 및 166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사업공간과 연구장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초기단계의 기업지원사업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까지 1,058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1,237건의 신기술사업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창출, 시장창출, 지역산업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억원, 건)

구 분	'95~'98	'99	2000	2001	2002	합 계
지원금액	130	200	240	288	200	1,058
수혜업체	106	245	308	353	225	1,237

금년에는 8개 테크노파크를 통해 877건이 접수되어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1/3수준인 297건을 선정·지원하기로 하였다.

〈테크노파크별 접수 및 선정현황〉

구 분	충도	경기	충남	경북	대구	광주	포항	부산	계	
신 청	271	145	90	63	34	115	18	141	877	
선 정	일반	84	51	30	21	14	27	7	32	266
	지역						15		16	31
계	84	51	30	21	14	42	7	48	297	

최대전력수요 4598만kW 기록

전력공급능력 5549만kW, 예비율 20.7%

2003년 8월 21일 12시 전력수요가 4598만kW를 기록하여 작년 8월 29일 4577만kW를 기록한 이후 1년만에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했다(작년보다 21만kW 증가).

금일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전력공급능력은 5549만kW로 공급 예비율은 20.7%(예비전력 951만kW) 기록했다.

금일 최대전력수요가 기록된 이유는 산업용 등 기본부하가 작년보다 130만kW 정도 높은 3820만kW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냉방부하가 780만kW 정도로 증가한 때문으로 추정된다(작년 최대치보다 110만kW 정도 적음).

한편, 금년 최대전력수요는 작년보다 308만kW 증가한 4885만kW로 8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기상조건 및 경제성장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최대전력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7~8월중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 냉방부하가 낮게 나타났다.

향후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보면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기상조건이 지속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갱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주에는 금주보다 100~200만kW 정도 증가하여 4700~4800만kW 수준의 최대전력수요가 전망된다.

한전, 중국 전력시장 최초 진출 하남성에 10만kW급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합자계약 체결

한국전력공사(사장 강동석)는 21일 오후 중국 河南省(허난성) 焦作市(지아주오시)에서 武陟(우즈) 발전청장 야오커송(姚克松)과 10만kW(5만kW×2)급의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20년간 운영사업에 관한 합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지난 7월 대통령의 訪中기간 중 체결한 한전과 하남성 정부간 「電力事業 協力」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성사된 것으로, 유동층발전소에 대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초로 중국 전력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앞으로 양국간 전력기술 교류 및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총투자비 6천 5백만 불로서 그 중 약 2천만 불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한전과 중국측이 7:3의 비율로 투자하게 되고, 나머지 약 4500만불 상당의 차입금은 전액 중국측에서 조달하며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운영에 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BOO : Build, Own &

Operate)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이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약 330여만 불의 배당수입이 예상된다. 流動層發電所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저질탄을 주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연료비가 저렴하여 원가경쟁력이 있으며, 유동층 연소특성상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전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5년부터 필리핀 말라야화력, 일리한화력 등 발전사업을 비롯해 미국, 호주, 베트남, 미얀마, 대만,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 전력 용역사업에도 적극 진출하여 2002년말 현재 해외전력사업에 총 1천여억 원을 투자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대폭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 기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8월 21일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로 합의·의결하였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파스,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등 6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현행 29품목에서 35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 물놀이기구 등의 공산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美, 뉴욕주 수용가보호강화를
위해 법 개정**

뉴욕주공익사업위원회(PSC)는 지난 6월 「가정용에너지공정법」의 적용대상을 확대, 수용가보호를 강화하였다.

동공정법은 1981년 시행 이래 동주의 유니버설·서비스의 요체로 되어 있으며, 미납수용가에 대한 요금플랜의 작성, 고령자라든가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보호, 보증금이라든가 연체이자 및 공급정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 주내의 전력·가스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신규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뉴욕주에서는 1996년에 PSC가 전력자유화를 결정하였다. 현재는 전면 자유화가 되어 있어 가정용을 포함한 전 수용가가 소매공급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유화 이행에 있어서는 당시 전력회사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자에게도 공정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PSC는 공정법의 적용이 참가에 대한 장벽이 될 것을 우려하여 신규 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PCS는 「라스트·리조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지방 전력회사의 서비스가 공정법에 준거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화 후 수용가 사이에서는 재무체질이 취약한 사업자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뉴욕주의 서부지역에서는 신규사업자가 도산하여 2만호에 가까운 수용가가 그 지방 전력회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보증금 등으로 납입하고 있던 합계 180만 불을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중시한 뉴욕주의회는 2002년 12월 전기·가스 공급사업을 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번 공정법의 적용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한 회사당 준수코스트는 연간 10만 불까지 추정되고 있다. 신규 사업자는 지금까지 완화된 규제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독자적인 요금메뉴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법의 준수가 요구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인지가 신규사업자의 체질을 시험하게 한다.

**캐나다, 원자력3기
8월 재개 전망 불투명**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력수요가 최고 절정에 이르는 8월중에 3기의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경제성의 악화를 이유로 '90년대 후반부터 운전을 멈추고 있던 브루스·파워사의 브루스A발전소 3·4호기와 온타리오·파워제너레이션사의 피커링A발전소 4호기의 운전재개가 결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브루스A 1호기의 운전재개는 9월 이후, 2호기도 10월 이후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피커링A의 4호기도 운전을 재개하는 것은 9월중으로 전망된다.

2002년 여름은 전력수요가 2500만 kW를 넘은 날이 3일 있었고 주내의 발전설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형태로 수입이 급증하여 전력수요가 400만 kW를 넘은 날도 2일이나 되었다. 8월 13일 피크시에는 가격이 MWh당 912 캐나다 달러를 넘어 8월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덧붙여서 말하면 8월의 최저가격은 27달러, 평균가격은 64달러로 석유 등 기타상품에 비해 시세변동이 심한 전력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 되었다.

2002년에는 수입에 의하여 최악의 정전이라는 사태는 면했지만 온타리오주의 전력시장을 규제하는 독립전력시장기관(IMO)은 3기의 원자력발전소 운전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의 메니토버주, 케벡주, 미국의 뉴욕주, 미시건주,

미네소다주 등 인근의 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는데 송전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송전망의 혼잡으로 온타리오주와 주위(특히, 미국)의 전력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IMO는 혼잡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여름은 작년만큼 더위가 심하지는 않으나 7월초에 전력수요가 2500만kW를 넘는 날이 있어 380만kW의 전력을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의 일기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줄타기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日, 사회경제생산성본부
앙케이트
전면자유화 「신중히 실시」 과반수**

사회경제생산성본부는 지난 6일, 에너지관련 산업의 장래에 대해 기업 관계자라든가 유식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앙케이트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전력·가스의 소매전면자유화는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회답이 직종에 관계없이 과반수를 이루었고 그 외에 전력업계 발전을 위한 요건으로서 「안전성의 확립」을 든 회답이 가장 많았다. 또 원자력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회답

이 약 7할을 점하고 있다.

동 본부에서는 이번 앙케이트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관련 산업의 장래에 관한 제언을 금년도 중에 종합할 방침이다.

■ 에너지산업의 장래

원자력, 「국가 책임 강화」 7할

앙케이트는 앞으로의 에너지관련 산업에 대하여 어떤 비즈니스나 기술이 유망시되고 있는지 또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책이 기대되고 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동 본부의 에너지환경정책 전문위원회(위원장-内山洋司·筑波大學 교수)가 금년 3월에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1,570명에게 송부하였고 회수율은 38%였다.

설문은 합계 38로, 원칙으로서 앞으로 10년간, 기술에 관해서는 앞으로 20년간을 고려한 회답을 요청하였다.

주요 회답결과를 보면 전력·가스 시장에서의 소매전면자유화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회답이 55%로 가장 많고 에너지공급기업과 그 이외의 기업, 유식자 등 직종별에서도 그 비율은 50%를 넘었다.

전력업계 발전을 위한 요건을 묻은 설문에 대한 회답에서는 「안전성의 확립」이 51%로 최고 높았다. 이어서 「자원의 안정 공급·확보」가 40%로 뒤를 이었다.

원자력관계에서는 관련산업의 앞으로 발전여부에 대하여는 현재와 변함이 없다는 의견과 성장을 기대하는 의견, 역으로 쇠퇴한다고 보는 의견, 이 3가지의 의견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 졌다.

또 원자력정책에 관한 국가와 전력업계의 책임·역할분담을 묻은 설문에 대해서는 44%가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라고 회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4%가 「전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회답하여 지금보다 더 국가의 역할을 증가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강함이 돋보였다.

그밖에 에너지공급 산업이 국내에서 발전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묻은 설문에서는 「분산형에너지기술의 개발」이라는 회답이 61%로 최고 높았다. 「에너지수송·저장에 관한 인프라정비」가 25%로 다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력거래소설립 준비위원회

日, 8월 말에 발족 예정

새로운 전기사업제도 하에서 발족할 예정인 도매전력거래소에 대하여 거래에 참가할 방침인 전력 각사라든가 신규참가자로 구성되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할 전망이다. 8월 말에라

도 제1회 회합이 열릴 예정이다.

전력거래에 참가할 예정인 관계자 간에 공개협의로 거래소로는 어떤 시스템구성으로 할 것인지, 또 거래소의 법인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위원회의 의론을 베이스로 하여 거래시스템의 상세한 것이 굳혀지면 올 가을 이후, 법인형태의 거래소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전력거래소는 새로운 전기사업제도 하에서 임의로 설립되는 사설법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2005년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으로 1일 전 거래와 선도거래로 구성하고 리얼타임시장은 이번에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연기하기로 하였다. 거래내용도 실제 전력의 수도를 수반하는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술 등을 사용한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 또 도매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가는 직접 참가할 수 없다.

이러한 아웃라인은 자유화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할 것인지, 취급하는 메뉴는 어떤 종류로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굳혀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수요를 거래소에 내놓는 플레이어는 주로 전력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전력측에서는 거래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PPS(특정규모전기사업자)나 대수용자가발전설치자

등과 거래소의 운영 룰에 대하여 협의의 장을 설치, 공정한 형태로 국내 최초의 거래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설립준비위원회는 沖繩電力을 제외한 9사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는 PPS, 대수용자가발전설치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참가자 간에서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의 사양이라든가 거래소 시스템발전선 등의 검토가 중심으로, 거래소운영에 관한 실무나 룰에 대해서는 이후 설립하게 될 거래소 법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인은 10월 경에라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東芝, 三菱電機
제조업용 전기설비사업
통합회사 설립 정식 합의**

東芝, 三菱電機는 지난 7월 22일, 10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플랜트용 전기설비 사업의 사업통합에 대하여 정식으로 통합회사「東芝三菱電機産業시스템(가칭)」을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양사의 제조업플랜트용 전기설비 사업 부문을 회사 분할하여 양사의 반반 출자회사인 티엠에이이렉트릭(TMAE, 본사-東京都港區北村宇 사장)에 승계. 동시에 TMAE와 東芝 자회사 2

사도 통합하여 東芝三菱電機産業시스템으로 한다. 새회사의 2006년도 매출고는 1470억엔, 양사는 사업통합으로 세계시장에서 이겨낼 체제를 구축, ABB, 시멘스에 버금가는 톱그룹의 산업시스템 인테그레이트를 지향한다.

이 회사의 사장에는 松山功武·전 三菱電機취체역이 취임한다. 자본금 150억엔(자본준비금 200억엔)은 東芝와 三菱電機가 절반씩 분할에 임하여 양사는 각각 TMAE가 발행하는 보통주식 5000주의 할당증자를 받는다. 23일에 분할계약서에 조인하고 10월 1일부로 회사분할을 실시한다.

양사가 분할하는 부문의 대상고는 東芝가 약 500억엔, 三菱電機가 약 540억엔, 또 東芝로부터 TMAE에 승계되는 자산은 약 291억엔, 부채는 131억엔, 三菱電機로부터는 자산 약 314억엔, 부채 약 144억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東芝, 三菱電機 공히 이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는 없으며 업적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회사는 범용품의 루트판매사업을 제외하고 국내의 제조업용을 주체로 하는 산업시스템이라든가 電氣品의 판매, 엔지니어링, 공사 등을 실시하는 외에 산업용감시제어시스템이라든가 파워일렉트로닉스기기를 개발·제조한다.

東芝와 三菱電機는 4월 18일 양사의 제조업 플랜트용 설비사업 통합에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있었다. ■